

##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 | 요약 |

- 미국 제47대 대선은 카멀라 해리스(민주)와 도널드 트럼프(공화)의 양자 대결로 확정
  - 민주당 후보 교체와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지지 선언 이후 진영 간 재 준비와 함께 주요 이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 형성
-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대립은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한국 산업 영향의 다층적 분석과 아울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시사
  - 미국 대선의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은 ① 개별 업종 및 부분적 이슈 함몰을 지양하고 한국 산업 전체의 손익을 고려한 국가 전략적 관점을 견지하고, ② 공표하는 정책의 최종 집행 범위와 수준, 실제 작동 경로, 통계·데이터 포착이 어려운 영향까지 추적하여 수립 필요
- 해리스(민주당)는 현재 바이든 정부와 유사하여 예측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
  -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 시, 또한 트럼프(공화당) 진영과 국내 경제정책(노동·증세·복지·의료·교육 등) 및 친환경·에너지 부문에서 입장 차이가 큰 편
- 트럼프(공화당)는 제조업·중산층의 부활과 미국 우선주의 견지
  - 대중국·통상 부문에서 ① 2000년 미·중 관계법에 근거한 대중국 항구적 정상적 무역관계 (PNTR/MFN) 지위 박탈, ② 2019년 제1차 미·중 무역협상의 이행점검과 제2차 미·중 무역협상을 추진하여 무역균형 및 상호성(Reciprocity) 불응 시 관세 조치 강화를 표명
- 주요 업종, 대선 시나리오별로 각각 기회 및 위기 요인 병존
  - 대중국 전략, 무역·통상, 친환경·그린전환 등의 정책 추진 향방이 우리 주요 산업의 미래 입지 선점과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의 중대 방향타로 작용할 전망
- 미국 주도의 국제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산업·통상 전략 수립 필요
  - (국가 신산업 전략) 업종별·권역별 30년 미래 전략 재설계
  - (국가 신통상 전략) 인도태평양·신흥국 및 대중국 전략 재정립

■ 미국 제47대 대선은 카멀라 해리스(민주)와 도널드 트럼프(공화) 간 양자 구도로 확정

- 미국 대선은 향후 국제정치 판도 및 국제분업구조 재편의 속도·범위·수준을 좌우할 2024년 최대의 정치 이벤트이자 면밀한 분석을 요하는 중대 사안<sup>1)</sup>
  - 민주당 후보가 교체되고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양강 구도가 정립되었고, 대중국·통상 전략, 외교·안보, 환경·에너지, 국내 경제·사회 정책 등 주요 이슈에서 대립

■ 트럼프 1기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를 돌아볼 때, 해리스(민주)와 트럼프(공화) 후보 당선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기회·위협 요인에 대한 다층적·심층적 분석 필요

- 대선 이후 산업 영향 분석과 대응전략을 수립할 때, ① 개별 업종 및 국한적 이슈에 함몰되지 않고 한국 주요 산업 포트폴리오 전체의 손익을 고려하는 국가 전략적 관점의 견지, ② 공표된 정책의 최종 집행 범위·수준 및 현장에서의 작동 양상, 공식 통계·데이터 미포착 지점(Shadow Transactions)까지 추적 및 규명하는 것이 중요
- 향후 미 국내 정치, 국제 분쟁 격화, 대중 관계 등에서 불확실성이 높지만 현재 시점에서 가용한 정보를 산업 전문 연구진 관점에서 정리 및 대안을 제시
  - 코로나19 팬데믹 및 국제분쟁으로 인해,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통상·경제 정책의 객관적 영향 분석이 아직까지도 용이하지 않다는 점은 향후 전망에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카멀라 해리스 후보, 바이든 행정부 및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이슈에 대해 유사<sup>2)</sup>

-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하여, 또한 트럼프(공화) 진영과 대립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국내 경제정책(노동·증세·복지·의료·교육 등) 및 환경·에너지 분야
  - 사회·문화 이슈(국경·이민, 인종 등)에서는 현재 민주당 지도부와 대체로 일치
- 대중국·통상 전략 및 외교·안보 이슈 역시 현 바이든 정부와 유사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더리스크(De-Risking)'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저가 공산품 수입 혜택 유지 및 첨단전략분야 한정 수출통제, 즉 '스몰 야드, 하이 펜스'
  - 우크라이나 지원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강화, 이스라엘 무기 공급 지속 표명

1) 본고는 산업연구원의 「미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i-KIET 산업경제이슈 제168호, 2024. 5)에 최근 동향을 업데이트하고,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2024. 9)을 요약하여 작성하였음.  
 2) 2024 Democratic Party Platform, 2024. 8. 19.

〈표 1〉 해리스(민주) 및 트럼프(공화): 주요 이슈별 공약·입장 비교

		해리스(민주당)	트럼프(공화당)
대중국 전략 (무역·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리싱(De-Risking)</li> <li>· 전략적 표적(Strategic &amp; Targeted) 관세</li> <li>· 공급망 전환과 안정화 우선</li> <li>· 수출통제 강화(첨단분야 위주, 동맹 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li> <li>· 중국 최혜국대우(MFN/PNTR) 철폐</li> <li>· 보편·상호 관세, 중국 60%</li> <li>· 수출통제 범위 확대(금융, 지식재산, 인력)</li> </ul>
	공급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쇼어링 + 니어·프렌드 쇼어링</li> <li>· 신뢰 동맹, 파트너 역할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쇼어링 중심</li> <li>· 자국 중심 공급망</li> </ul>
통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 협상(Multi-Lateral)</li> <li>· 인도태평양</li> <li>· 노동·기후(친환경) 요건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자 협상(Bi-Lateral)</li> <li>· 보호무역주의</li> <li>· 무역수지 균형 및 상호성(Reciprocity) 원칙</li> </ul>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탄소·그린전환 지속 추진</li> <li>· 기후변화 적극 대응</li> <li>·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가속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석연료 산업 부흥</li> <li>· 기후변화 회의론</li> <li>· 원자력 발전 확대</li> </ul>
제조업 보조금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IPS 보조금 확대</li> <li>· IRA 생산 인센티브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IPS 보조금 유지</li> <li>· IRA 생산 인센티브 축소</li> </ul>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RA 전기차 보조금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RA 전기차 보조금 축소(폐지)</li> </ul>
외교·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및 러시아 견제</li> <li>· 우크라이나 지원 및 NATO 편입</li> <li>· 이스라엘-하마스 종전 우선 추진</li> <li>· 국제주의(Internationalism)</li> <li>· 동맹 연계 협력</li> <li>· 난민·불법이민자 처우 개선</li> <li>· 포괄적 이민 개혁(전반적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견제 우선</li> <li>· 러·우 전쟁 종결, 우 일부 NATO 편입</li> <li>· 이스라엘 지지, 이란 견제</li> <li>· 고립주의(Isolationism)</li> <li>· 동맹 비용·역할 압박</li> <li>· 국경봉쇄, 불법이민자 송환(Deportation)</li> <li>· 합법·기준 충족 이민 장려</li> </ul>
국내 경제 정책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소득층·기업 세율 인상</li> <li>· 정부 지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 감세(2017 감세법-TCJA 일몰(2025) 연장/영구화)</li> <li>· 규제 점검 및 축소 제도·기관 설치</li> </ul>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불평등 완화</li> <li>· 신생아 가정, 저소득·중산층 세액공제 확대</li> <li>· 주택·학자금·의료비 구매·대출 부담 경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자유 확대</li> <li>· 미국 국부펀드 출범</li> <li>· 사회보장연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상향</li> </ul>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의료보험 역할·비중 확대 (오바마케어-ACA, 메디케어·메디케이드)</li> <li>· (약가 인하) 공공의료보험기관-제약사 간 인하 협상 및 대상 약제 선정(IRA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의료보험 선택 권한 강화 (전국 단위 의료보험 상품 경쟁 촉진)</li> <li>· (약가 인하) 국내외 제약사 경쟁 촉진</li> <li>· 의약·식품·화학 기업과 규제기관 간 유착 해소</li> </ul>
	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품목 생산·유통 기업 가격 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 생산 확대로 유가 하락, 생산비 감소</li> </ul>
	금리 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독립성 보장</li> <li>· 가상자산 관련 바이든 대비 친화적·개방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부·백악관 금리 결정 권한 개입</li> <li>·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미국 주도권 확보</li> </ul>

자료: 산업연구원(2024. 5) 및 2024 Democratic Party Platform & 2024 Republican Party Platform을 활용하여 산업연구원 작성.

■ **트럼프 진영, 제조업·중산층 부활 및 미국 우선주의 재확인**

- 리스트 벨트 출신 러닝메이트 J.D. 밴스 및 최근 지지를 선언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역시 미국의 산업 기반 강화 및 중산층 부활을 강조
  - 대외 전쟁비용 원조 축소 및 국내 산업정책 강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와 한국 등에 방위비 분담금 상향, '공정' 무역 및 적자 규모 축소 선언

- 트럼프 1기와 비교하여 대중국·통상 전략에서 더욱 강경한 무역 조치 적용을 표명
  - ❶ 2000년 미·중 관계법에 근거하는 대중국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MFN) 지위 철폐<sup>3)</sup>,
  - ❷ 2019년 제1차(Phase-1) 미·중 무역협상 이행 점검 및 제2차 협상 추진<sup>4)</sup>

■ **해리스(민주) 및 트럼프(공화) 모두 중국 견제와 적극적인 관세·산업정책 추진 예상<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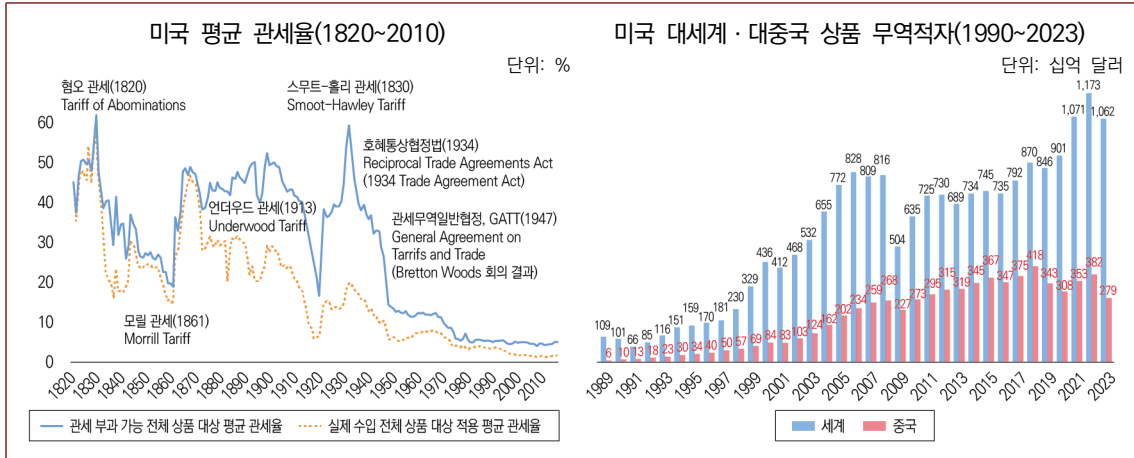
- 해리스(민주)는 대중국 전략적 표적(Strategic & Targeted) 관세, 트럼프(공화)는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 (목적) 관세로 구분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트럼프 1기에 도입한 대중국 301조 관세(3,500억 달러 상당) 유지 및 2024년 4월 전기차 대상 관세 100%를 포함하는 180억 달러 상당 수입품 대상 추가 관세 부과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제조업·중산층 부활 요구의 적극 수용으로 평가
  - 트럼프는 상품무역뿐 아니라, 금융투자·지식재산·인력·연구개발 등 전반적 미·중 간 교류 범위 및 수준과 상호의존도를 축소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급진적인 정책 추진 가능
  - 탈중국 국제분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양 후보는 속도·수준·범위의 상당한 차이 예상
- 보조금·세액공제 등 산업정책 및 (비)관세·쿼터 등 무역구제조치에서는 목표 분야 상이
  - 해리스(민주) 집권 시 그린전환·친환경 부문에 대해 연방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산업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공화) 집권 시 전통 제조업(자동차·철강·화학·방산)에 대한 지원책 강화 예상
  -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ct) 기획 및 입안 시기가 트럼프 1기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전략상 동법에 의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 축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 **향후 미국 대선뿐 아니라, 2024년 상·하 양원 연방 총선(Federal General Election)과 주지사·의회·법무장관 선거 등 지방 총선의 결과와 영향 분석도 중요**

- 현재 하원(공화 220, 민주 211, 공석 4) 및 상원(민주 46+4(무소속), 부통령(당연직) 1, 공화 49) 선거 역시 차기 미국 행정부의 주요 산업정책 및 법제화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 11개 주지사 및 2개 주의회 선거에서 한국기업이 투자한 지역은 미시간 등 일부

3) 2001년 11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전 준비 단계로서, 빌 클린턴 행정부 및 미국 제106대 의회는 2000년 10월 10일, 동법 통과로 기존 중국에 대한 매년 최혜국대우(MFN) 지위 심사 및 갱신 권한을 폐기.  
 4) 트럼프 1기 행정부 무역대표부(USTR) 및 상무부 등 주요 통상 관련 부처 각료들은 제1차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 측 이행 의무가 불완전하다는 입장(미국 상품 구입 규모 등 수출입 이슈 및 신용평가, 자산운용, 플랫폼서비스, 지급·결제, 콘텐츠 등 시장 접근의 상호성 포함)을 보여 무역균형 도달 시점까지 추가적 미·중 무역협상 요구 및 관세 인상 예상.  
 5) The New York Times(2024), "Harris and Trump Embrace Tariffs, Though Their Approaches Differ", Aug. 27.

〈그림 1〉 미국의 장기 평균 관세율 및 대세계·대중국 상품 무역적자 추이



자료: (좌) St. Louis 연준, 미국 상무부, 통계국, 미국 국제무역위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Lighthizer(2023), “No Trade is Free”, p. 44 재인용. (우) U.S. Census Bureau, Trade in Goods with World & Trade in Goods by Country (접속일: 2024. 8. 31).

〈표 2〉 주요 산업의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주요 영향(요약)

해리스(민주당)	업종	트럼프(공화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도체 수출, 점진적·안정적 다변화</li> <li>인공지능·첨단공정 위주 수출통제</li> <li>중국 디바이스 기업 제재 수준 약화</li> </ul>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도체 수출, 단기 충격, 중장기 다변화</li> <li>레거시·첨단공정 포괄 수출통제 강화</li> <li>중국기업 제재로 한국의 시장점유율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수입관세 유지</li> <li>전기차 구매보조금, 내연차 규제 강화</li> <li>대중 수출 차단, 탈중국 공급망 구축</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관세 인상(인상폭 중국 &gt; 한국)</li> <li>전기차 보조금 축소, 내연차 규제 완화</li> <li>탈중국 공급망 가속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RA 생산세액공제·구매보조금 유지</li> <li>주요 기업 미국 생산·투자 증가</li> <li>미국+우방국 공급망의 탈중국화 가속</li> </ul>	 배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RA 생산·소비 혜택 폐지(축소)</li> <li>세계 배터리 수요 감소, 투자 전반 위축</li> <li>대중국 견제로 한국의 현지 점유율 상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무역장벽(GSSA, CCA 등) 강화</li> <li>철강교역 블록화, 친환경 기술 투자 증가</li> <li>판재류 리스크와 친환경·고기능제품 기회 확대</li> </ul>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적 관세·쿼터(232조) 장벽 강화</li> <li>무역구제조치(반덤핑·상계관세) 증가</li> <li>제품·원료·반제품 공급망의 탈중국화 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망 내 ESG·노동·공정 기준 강화</li> <li>무역구제조치, 우회수출 조사 증가</li> <li>친환경 공정전환 가속화</li> </ul>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유·가스 개발로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li> <li>보편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단가 상승</li> <li>자국 기업 우대로 미국 내수시장 접근성 약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중국 바이오제약 연합으로 시장접근성 향상</li> <li>CDMO·시밀러 수출 증가세 유지</li> <li>약가 인하로 국제 R&amp;D 참여기회 축소</li> </ul>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수의약품 자립 추진, 관세 인상 리스크</li> <li>CDMO·시밀러 수출 (최소) 유지</li> <li>약가 인하로 미국 내수시장 접근성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 국방비 지출 확대로 수출시장 확대</li> <li>구매국 현지생산 요구로 해외투자 증가</li> <li>미국·NATO 방산 공급망 진입 기회 확대</li> </ul>	 방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분쟁 단기 종결 시 수출 둔화 리스크</li> <li>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 시 방산협력 후퇴</li> <li>미국 방산기업과 경쟁 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탄소·친환경 교체수요 증가로 관련 기계·장비·부품 수출 확대 기회</li> <li>수소건설기계, 친환경 HVAC 수요 증가</li> </ul>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추·건설 관련 기계·장비 수출 증가</li> <li>화력발전 관련 가스터빈 관련 수출 기회</li> <li>탄소중립 관련 생산·기술개발 투자 위축</li> </ul>

자료: 산업연구원.

## (1) 반도체

### ■ 주요 정책·강령 비교

- 해리스 및 현 민주당 행정부는 국내 첨단반도체 제조기반 확보 및 고성능 인공지능(AI) 관련 소자 중심 수출통제 기조를 유지
  -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전략 대비, 현재까지 뚜렷한 차이점 없음.
- 「반도체와 과학법」 기획·입법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주도, 중국 반도체산업 추격 저지 및 핵심 중국기업의 발흥 억제 ▶ 메모리·비메모리 주요 기업 점유율 방어 성공 평가
  - \* ① 스마트폰 국내 주요 기업 점유율 방어(2019년 삼성전자 출하량 2억 9,600만 대, 화웨이 2억 4,100만 대, 애플 1억 9,300만 대) ▶ AP, D램, 낸드(NAND) 국내 기업 판로 보호, ② EUV 및 주요 장비 수출통제로 D램 3강 및 파운드리 양강 구도 유지 등 반사이익 수혜 평가

### ■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

- 해리스(민주당) 집권 시 미국 주도 국제 반도체 분업구조 변화는 현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수요산업에 대한 견제가 약해서 중국 반도체 발전 억제 실효성 약화 우려
  - \* 2021년 이후 존재감을 상실한 화웨이(Huawei) 스마트폰 출하량 급증, 2023년 1분기~2024년 1분기 성장률 170.4%, 과거 자회사 아너(Honor) 출하량 합계 시 2024년부터 연간 1억~1억 5,000만 대 돌파 예상(Gartner, 1Q24)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미국 주도 국제 반도체 분업구조 변화 기조 불변, 그러나 중국기업 대상 수출통제 수준 심화 및 범위 확대(지식재산, 금융투자, 인력) 전망
  - \* 전 상무장관 윌버 로스(Wilbur Ross), 미국 지식재산·기술 포함 시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중국기업 요소(소부장·SW) 공급 차단 및 판로 제한 조치
  - \* 2019년 화웨이 스마트폰 출하량 2억 4,100만 대에서 2021년 4,300만 대로 82%나 급감
- (공통) 반도체 제조기반 내재화와 첨단제품 주도권 위한 「반도체지원법 II」 추진 가능
  - 연방정부 입법이 현실화된다면, 천문학적 연구개발비가 소요된 초미세공정·인공지능 팹리스 및 메모리·비메모리 첨단공정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자원 보조 가능
  - \* 미국 하원, 7월 31일 팹리스 기업 대상 25% 세액공제 도입 법안 발의<sup>6)</sup>
  - 2030년 이후 Sub-2nm 파운드리 내 미국 점유율 및 가치사슬 중심성 강화 전망, 인텔의 사업 안정화 및 수율 확보에 성공한다면 한국과 대만 파운드리에 대한 미국 주요 팹리스의 발주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6) Semiconductor Technology Advancement and Research(STAR) Act of 2024.

## ■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해리스(민주당) 집권 시 중국 핵심 디바이스 기업 견제가 트럼프 1기에 비해 약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 위협(일부 제품의 중국 자급화 성공 및 국산 수요 증가에서 비롯)
  - \* (AP) 2023년 하이실리콘 매출액은 11위이나 전년비 500% 증가한 7억 4,000만 달러를 기록, 웰컴, 미디어텍, 삼성전자 매출은 IT경기가 악화되면서 15~30% 감소(Gartner, 1Q24)
  - \* (낸드) 양쯔메모리(YMTC) 매출액 6위, 전년비 4.3% 성장한 21억 8,000만 달러(삼성전자는 39.1%, SK하이닉스는 34.2% 감소), 양쯔메모리 세계 점유율은 3.61%에서 5.88%로 상승(Gartner, 1Q24)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및 세액공제 혜택 축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반면, 반도체 및 핵심 판로 수요산업 내 중국 경쟁기업 견제 강화로 반사이익 기대
  - 「반도체지원법」 관련 동일 지원 혜택 대비 추가 투자 요구가 있을 수 있지만, 중국 견제 및 자국 내 첨단공정 제조기반 생태계 구축이라는 국가 전략을 고려할 때 현실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 \* 현재 세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출하량 기준) 1위 삼성전자 및 2위 애플 합계는 35%, 중국 브랜드(샤오미, 오포, 비보, 화웨이, 아니, 테크노, TCL 등) 점유율 45% 육박
  - \* 프리미엄 제품군(500~600달러 이상) 안드로이드폰 세계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견제 강도를 높인다면 한국산 제품도 수혜 기대 가능

## ■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

- 해리스(민주당) 집권 시 중국 메모리·파운드리 기업에 대해 강력한 수출통제를 요구하고, 한·미·일·대·EU 핵심산업 내 주요 기업의 특허·지식재산(IP) 침해 및 보안 우려에 대해 시장 접근 차단 공동 추진
  - D램·낸드 및 비메모리 소자 양대 매출원인 AP·CIS 점유율 방어·확대와 직결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중국에서 대만 및 한국 파운드리 기업에 대한 견제 확대에 대응
  - 중국 SMIC, 대만 TSMC 대비 삼성전자의 국제정치적 리스크는 낮으나, 종합 전자기업으로 여전히 첨단공정 파운드리 물량 수주에 불리하므로 미국 현지 고객사 수주 및 현지 시설 조기 완공 및 안정화 시급
- 현재 주요 중국기업의 메모리 부문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수출통제 수준 강화를 요구하고, 동맹·협력 국가들의 핵심 수요산업(스마트폰·태블릿·PC·위치·가전) 내 중국 관련 사이버보안·정보유출 등 국가안보 위협 요인 점검 촉구

- 400~500단 이상 낸드플래시 양산을 위한 극저온 식각 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을 대상으로 미국·일본의 각 부처·기관 수출통제 리스트 등재 및 실효성 제고에 협력
- 국내 주요 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공기단축을 위한 규제 돌파

〈표 3〉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반도체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분야	해리스(민주당)	트럼프(공화당)
주요 정책	반도체 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주도 국제 분업구조 변화 기조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과학법(2022) 지원책 변화 리스크</li> <li>· 첨단 제조기반 및 생태계 조기 안착을 위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 축소 가능성은 낮음</li> </ul>
	수출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팹리스·추가 시설투자 지원 입법화 가능</li> <li>· 첨단제품(미세공정,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 위주 수출통제 기조</li> <li>· 중국 디바이스 기업 견제 약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통제 범위 확장(금융·지식재산·인력)</li> <li>· ICT 최종재(스마트폰, PC, 서버 등) 관세 인상 전망</li> </ul>
산업 환경의 변화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스마트폰 등 핵심 수요산업의 점유율 확대 억제력 약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디바이스 기업 견제로 세계 반도체 수요에서 중국 비중 감소세 지속</li> </ul>
	생산·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첨단 파운드리 제조 점유율 상승 전망</li> <li>· 대만 파운드리 제조 점유율 하락, 중국 레거시 점유율 상승 전망</li> </ul>	
	경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인텔(Intel) 자국 팹리스 물량 수주 확대 가능성 현실화(현재 수주액 세계 2위)</li> <li>· (메모리) 미·일 D램·낸드 기업 지원 강화하면서 기술격차·시설투자 추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기술 자립도 상승 예상</li> <li>· 양쯔메모리(YMTC) 낸드 5강 구도 위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 장비 수출통제 강화 (낸드·파운드리 부문 집중)</li> </ul>
GV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미(텍사스·오하이오·뉴욕·애리조나) 지역 소자 제조 및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li> </ul>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국 반도체 수출집중도 하락</li> <li>· 인도·베트남 비중 중장기 상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국 ICT 제품 고관세 부과 시 반도체 단기 수출 위축 후 점진적 회복·다변화</li> </ul>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국내외 투자 비중 및 규모 유지</li> <li>· 아세안, 인도, 멕시코 등 설비 이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지원법 지원으로 추가 투자 요구 시 미국 투자 비중 소폭 확대</li> </ul>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유지, 중기 완만한 수출선 전환</li> <li>· 대중국 장비 수출 제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감소, 중장기 판로변경 연착륙</li> <li>· 중국 반도체 기술추격 지체</li> </ul>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유럽·일본 첨단장비 수입, 대중국 범용 소재·부품 수입 의존 지속</li> </ul>	
	공급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유금속 조달 경로 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용 소재(화학·금속·희토류) 수출통제 리스크 확대</li> </ul>
	GV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주요 팹리스·IDM 대만·한국 파운드리 대상 발주 물량 감소</li> </ul>	
정책 시사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낸드 중국 추격 우려) 한·미·일 연계 400~500단 이상 낸드 양산용 극저온식각장비 등 수출통제 강화 요구</li> <li>· 국내 주요 기업 시설투자 지원 수준 전향적 제고 및 공기(工期) 단축 위한 규제 완화</li> <li>· 미국 팹리스 세액공제(25%) 확대 시 국내 기업 수혜받을 수 있도록 추진</li> </ul>	
대응 방향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디바이스·낸드 추격 대응 기술경쟁력 고도화, 기술·인재 보안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제조전문서비스(EMS) 인도·태평양 이전 가속화 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공정 핵심 수요산업 내 중국기업 점유율 확대 제어 촉구(한·미·일·대·EU) 지식재산·기술 탈취·도용 시 시장접근 제한 등 적극적 대응</li> </ul>	

자료: 산업연구원 정리.



## (2) 자동차

### ■ 주요 정책·강령 비교

- 자동차산업에 대한 양 진영 공약의 가장 큰 차이는 전기차 관련 보조금과 환경규제
  - 해리스(민주당)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의 구매 및 제조 보조금 유지, 트럼프(공화당)는 전기차가 미국 자동차산업 및 경제에 불리하다며 정부지원 축소(폐지) 전망
  -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수단인 CAFE<sup>7)</sup>는 민주당이 점진적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는 최소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한다는 입장
- 자동차 관세에서도 해리스는 주요국에 대해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트럼프는 미국 외 생산 차량에 최대 100% 관세 등 일반관세(10%)보다 현저하게 높은 관세 부과를 선언
  - 중국에 대해 민주당은 전기차만 100% 관세 부과, 트럼프는 중국산 자동차 모두 60% 이상의 관세 부과, 중국업체의 멕시코 생산 자동차도 50% 이상의 관세 부과 등
  - 공급망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IRA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우호국 역할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이지만, 트럼프는 중국산 부품 전반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중국 배제

### ■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

- 해리스(민주당) 집권 시 전기차 수요의 안정적 확대와 내연기관차의 비중 축소 정책기조가 계속되면서 전기차 중심의 미국 내 투자·생산이 확대할 것으로 예상
  -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의 중요성이 커지고, 다국적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전기차 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내연기관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비중이 상승 예상, 세계 전체의 전기차 전환이 지연되면서 일본업체에 유리
  -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등으로 미국 내 자동차 전반의 투자 및 생산은 증가
- (공통) 미국 시장에 대한 중국산 및 중국 브랜드 전기차 진입의 원천 봉쇄
  - 민주당은 전기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은 미국 시장 진입이 힘들었고, 트럼프는 자동차 전반에 걸쳐 고율 관세 부과 선언
  -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도 양당 모두 일치하지만, 민주당은 전기차 부품 중심이고 트럼프는 자동차부품 전반에서 중국을 배제하며 여타 국가들도 미국 내 생산을 요구

7) 기업 평균 연비 규제(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 ■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해리스(민주당) 집권 시 우리 기업의 전기차로의 전환이 지속되고, 수요의 미국 의존이 심화 되겠지만 현지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전기차의 수출은 단기적으로 위축
  - 중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전기차도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일정 비율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구조로 안정화 예상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국내외 전기차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 조정이 불가피하며, 전기차 공장의 용도 변경 등 예상
  - 추가 관세 부과 등으로 전반적인 자동차 수출이 위축되고 현지 자동차 생산이 확대되지만, 중국산 부품 수입이 제한된다면 우리 부품의 수출이 증대될 가능성도 존재
- (공통) 공급망에서 양측 모두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탈중국 자동차 부품 공급망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대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민주당은 전기차용 부품 및 소재에 중점을 두는 반면, 공화당은 자동차 부품 전반에 걸쳐 중국을 배제

## ■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

- 해리스(민주당) 집권 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IRA 보조금 등에서 우리 수출 및 우리 기업 제품에 유리하도록 하는 협상 추진 필요
  - 기업 차원에서 전기차의 경쟁력(가격 및 성능 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부품 및 소재 업체 육성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자동차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등의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이를 최소화하려는 통상외교 노력이 필요
  - 미국에 대해 자동차에 있어 대규모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저지
  - 미국에 집중된 자동차 제품의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도 필요
- (공통) 세계 전체의 전기동력차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전환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다양한 기술적 대응 병행 필요
  - 자동차 공급망, 특히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이 배제되고 있어 우리 자동차산업(기업) 주도로 공급망 다변화 및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는 노력 필요

〈표 4〉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자동차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분야	해리스(민주당)	트럼프(공화당)
주요 정책	IRA	· 전기차 구매보조금 및 전기차 제조 전환 보조금 유지	· 전기차 관련 보조금의 축소 혹은 폐지 · 전기차로의 전환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인식
	환경 규제	· 2031년 CAFE 50.4mpg 유지 · 2027년 이후 매년 2%씩 강화	· CAFE 연비규제를 최소 수준 완화나 폐지 · 기후변화 회의론 관점
	관세	· 현행 관세 유지	· 자동차에 대해 10%보다 높은 관세 부과 · 미국 외 생산 차량에 100% 부과 선언
		·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100% 추가 관세	· 중국산 자동차에 60%보다 높은 관세 부과 · 중국기업 멕시코 제조 자동차도 50% 관세
공급망	·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및 우호국 역할 강화(IRA 보조금 등 활용)	· 중국산 부품 전반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	
산업 환경의 변화	수요	· 전기차 수요 안정적 확대와 내연기관차 비중 축소 ·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배터리 전기차의 판매는 유지, PHEV의 빠른 성장	· 전기차 시장 전반이 위축될 전망 ·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지고, 내연기관 자동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비중이 상승 · 세계 전체의 전기차 전환을 제한
	생산·투자	· 전기차 중심의 미국 내 투자·생산 확대 · 세계 전반이 전기차로의 전환 투자 및 생산	· 전기차 투자 및 생산은 위축되지만, 자동차산업 전반의 미국 내 투자는 강화
		·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다국적 자동차업체 간 경쟁 심화 ·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중요성 강화	·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서 우위에 있는 일본업체 등에 유리 · 미국 이외의 수출시장에서 경쟁 심화
	경쟁 관계	· 미국 시장에 대한 중국산 및 중국 브랜드 전기차 진입 원천 봉쇄 · 후발국 등을 중심으로 미국 이외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 심화	
		공급망	· 전기차 부품 중심으로 공급망 탈중국화 ·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배제 추진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수요	· 전기차 전환 지속 및 미국 비중 확대	·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자동차 중요성 확대
	투자	· 현행 국내외 투자 비중 및 규모 유지	· 국내외 전기차 투자 조정 · 전기차 공장의 용도 변경
	수출	· 전기차 현지생산 본격화하면서 대미 수출 축소 · 중장기적으로 일정 수준 수출 유지	· 전반적인 자동차 수출 위축 · 중국 물량 대체 부품 수출 확대
	수입	· 큰 변화 없겠지만, 일부 미국 수출 차량용 부품의 중국 수입 축소	
	공급망	· 전기차용 부품 및 소재의 미국 생산 및 중국 배제에 따른 우리 역할 강화	· 중국 자동차부품 전반의 미국 공급망에서 일정 수준 배제와 우리 역할 강화
정책 시사점	통상	· IRA 보조금 등에 대응한 미국과의 협상 능력 강화	· 추가 관세 부과 등에 대응하는 협상 능력 강화 및 관련국과의 협력 추진
	공통	· 핵심 부품 등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 및 유턴기업 지원 강화 · 중국 배제에 따른 자체 공급망 및 우리 기업 주도 공급망 구축 지원 ·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위한 동맹국 및 자원 보유국 등과의 협력 강화 · 세계적 환경규제 및 시장환경에 대응한 다양한 기술에 대응하는 지원	
대응 방향	공통	· 미국에 집중된 수출의 다변화 노력 · 공급망의 다변화와 국내 공급망 확충(국내 생산 효율 향상) ·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다양한 기술적 가능성에 대응	

자료: 산업연구원 정리.

### (3) 배터리

#### ■ 주요 정책·강령 비교

- 해리스(민주당) 집권 시 그동안 배터리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던 ‘친환경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친환경에너지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기존 법안대로 지속적 추진 가능
  - 특히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수요를 크게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IRA 친환경차 구매보조금<sup>8)</sup>의 안정적 운영 예상
  - 주요 배터리 기업의 미국 내 생산·투자 확대에 기여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sup>9)</sup> 역시 해리스 행정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IRA 배터리 분야 지원 정책의 축소 개편 가능성 높음.
  - 친환경에너지 분야 지원 강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고려하면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 및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의 축소 혹은 폐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트럼프는 “IRA 세액공제의 전면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부통령 후보 J.D.벤스는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폐지안이 담긴 ‘Drive American Act’ 법안 발의(2023. 9)
  - 공화당 집권 시 트럼프 예비 공약집인 ‘Agenda 47’에 포함된 파리기후협약 탈퇴, 내연차 연비규제 강화,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 폐지도 예상

#### ■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

- 해리스(민주당) 집권 시 미국 시장이 글로벌 배터리산업의 성장세를 견인할 전망
  - 유럽과 중국에 비해 전기차 침투율이 낮아 성장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에서 IRA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지속 운영 시 미국의 배터리 수요 호조세 유지 예상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미국 내 전기차 보급이 후퇴하면서 글로벌 배터리 수요 위축 예상
  - IRA가 폐지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된다면 이미 전기차 보조금 철폐·축소 추세에 들어선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본격적인 배터리 수요 둔화 불가피
  - 미국 내 IRA 수혜 지역에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점을 고려하면 법안 폐지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한 지원 규모 축소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

8) 친환경차 구매 시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

9)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판매 시 1kWh당 최대 45달러 생산세액공제 부여.

-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 움직임은 공통적으로 강화될 전망
  - 해리스는 바이든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도 미국 제조업 재육성이라는 정강을 고려하면 중국 배터리산업에 대한 견제 조치 확대 전망

#### ■ 한국 배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해리스(민주당) 집권 시 미국의 중국 배터리산업에 대한 견제 수준을 높이면서 미국 시장에서 대중국 경쟁우위 확대 예상
  - (투자) IRA 세액공제에 따른 미국시장 판매량 및 영업이익 증가라는 기대이익, 미국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 등을 감안할 때 한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시장 투자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공급망) 해외우려국 제도<sup>10)</sup>, IRA 배터리 요건 준수 비율 강화<sup>11)</sup>로 수입선 다변화 등 탈중국 공급망 구축 불가피
  - (수출) 미국 배터리 시장 성장세로 대미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나 미국 내 투자 확대로 수출 물량이 현지 생산물량으로 대체된다면 증가세에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배터리 셀 및 소재 부문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시장 내에서 대중국 경쟁우위 확보 가능
  - (투자)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IRA 폐지 또는 지원 규모 축소로 한국 배터리산업의 투자 위축 불가피
  - (공급망) IRA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구축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 공급망 다변화·내재화 등 대비 필요
  - (수출) 수출의 경우 미국 내 배터리 수요 위축은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지만 미국 시장에서 중국 대비 수출경쟁력 상승 기대

#### ■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

- 해리스(민주당) 집권 시 인조흑연, 수산화리튬 등 IRA 세액공제 관련 우려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 강화
  -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 정책 강화에 대비해 광물·소재 수입선 다변화, 공급망 내재화 지속 추진

10) 중국기업으로부터 소재·광물 조달 시 세액공제 불가.

11) 중국 외 지역 조달 요건 매년 10%포인트씩 확대.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전 세계적인 전기차 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미래모빌리티(UAM, E선박) 수요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한국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시간, 오하이오 등의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IRA 폐지 또는 신규 행정명령에 대한 양국 간 협상이 진행될 경우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 필요
- 공통적으로 전고체·리튬항 등 차세대 전지 기술 개발, 전력·용수·인력 등 인프라 구축, 세제·보조금 지원 확대 등 필요

〈표 5〉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배터리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분야	해리스(민주당)	트럼프(공화당)
주요 정책	전기차 보급	· 내연차 규제, 전기차 의무화 등 전기차 보급 정책 지속 추진	· 파리기후협약 탈퇴, 내연차 규제 완화 등 전기차 보급 정책 후퇴
	IRA	· IRA 내 배터리 관련 제도 지속적으로 운영 ·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세액 공제(AMPC), 해외우려국(FEOC) 제도 등	· IRA 폐지 또는 지원규모 축소 · 다만, 공화당 내 지역구별 이해관계 등 감안 시 폐지까지는 어려울 전망
산업 환경의 변화	수요	·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배터리 수요 성장세 이어질 전망	· 미국 내 전기차 보급정책 후퇴로 글로벌 배터리 수요 감소
	생산·투자	· 주요 글로벌 기업의 미국 내 생산·투자 증가	· 수요 위축에 따른 투자 감소, 글로벌 과잉공급 우려
	공급망	· 미국 및 우방국 중심의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재편 확대	· 중국 견제, 미국 제조업 재육성 정책 강화로 탈중국 공급망 재편 확대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투자	· IRA 기대이익, 향후 성장성 고려해 미국 시장 투자 확대	· IRA 후퇴, 전기차 성장 둔화로 투자 전반 위축
	경쟁 관계	· 탈중국 공급망 정책 강화로 미국시장 내 대중국 경쟁 우위 확보	· 중국산 제품 고관세 부과로 미국시장 내 대중국 경쟁 우위 확보
	공급망	· FEOC, IRA 배터리 요건 강화 등 공급망 다변화·내재화 확대	· IRA 지원규모 축소에도 FEOC, IRA 배터리 요건 지속될 가능성 → 공급망 다변화·내재화 확대
	수출	· 미국시장 성장으로 증가 예상되나 현지생산 물량 확대는 부정 요인	· 미국 내 배터리 수요 위축은 악재이나 대중국 수출경쟁력 상승 기대
대응 방향		· 공급망 다변화·내재화, 국내 생산 지원 강화 등	· 한국기업의 미국 지역경제 영향 분석, EV 외 수요 진작 · 분석결과를 향후 IRA 재협상 시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
	공통	· 차세대 기술 개발,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세제·보조금 지원 확대 등	

자료: 산업연구원 정리.

## (4) 철강

### ■ 주요 정책·강령 비교

- 해리스(민주당)의 기후변화 대응이 강화되면 현재 잠정 중단된 GSSA(글로벌 지속가능한 철강 협정) 타결을 위한 협상 재개 및 탄소무역장벽의 도입 현실화 예상
  - (GSSA) 비시장경제국 공동 관세, 고탄소 철강 무역규제, 공통 탄소측정 기반 논의 본격화
    - \* 현재 수입철강재 탄소세 부과, 수입품의 탄소집약도 조사 의무화 목적으로 하는 PROVE IT Act, Foreign Pollution Fee Act of 2023, Steel Modernization Act of 2024 발의
  - 한편, 탄소무역장벽 이슈는 공화당에서도 법안이 제출되고 트럼프 1기 USTR 대표를 역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도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초당적 의제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트럼프(공화당) 1기 행정부 경제안보 정책인 무역확장법 232조 계승·가능성에 주목 필요
  -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의 안보 강화를 명목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각각 25%, 10%의 보편관세 부과
    - \* 현재 한국은 관세 대신 쿼터 부과국으로 적용받고 있으나(2015~2017년 70% 수준인 연간 263만 톤), 향후 232조의 재산정으로 쿼터 부과국에 대한 수입쿼터 축소 가능성도 존재

### ■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

- 해리스(민주당) 집권 시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기조로 철강 교역의 블록화 예상, 그린철강 시장 선점을 위한 주도권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
  - GSSA 협정의 참여국을 영국, 일본, 호주 등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미국 상무부가 지원하는 FMC 참여 기업의 확대로 공급망 차원의 저탄소 소재 활용 의무 증가
    - \*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기술 상용화 가속화, 이를 지원하는 각국 정부 보조금도 확대 예상,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전기로 및 대체철원(HBI 등) 관련 설비투자도 활성화 예상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기반한 보호무역이 심화되고, 철강 수요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철강 원료 공급망 재편의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초과공급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주요국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확산, IRA 친환경 인프라 투자 위축, 수요산업 영향으로 철강 수요 불확실성 증가
    - \* 철강산업 내 중국 영향력 및 의존도 탈피 위한 원료·반제품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 예상
- (공통) 탈중국화로 미국 시장진입 제약, 미국 생산경쟁력 향상으로 수입규모 축소 가능

- 미국의 제조업 재건(공화당),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민주당) 등 양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공통적으로 미국 내 조강수요 증가 및 자체 철강생산 역량 강화 효과 전망

### ■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해리스(민주당) 집권 시 불공정무역 제재 강화, 탄소중립 목적의 수출입 규제 도입으로 수출 시장 및 수출 품목의 불확실성 증대
  - 2022년 발의된 청정경쟁법(CCA)이 현실화된다면 EU CBAM 및 타 국가의 탄소무역 규제로 파급될 수 있어 판재류가 주력 수출품인 한국 철강산업에 큰 위기 요인
  - \* 반면, 청정에너지 및 친환경 제품용 고기능성 철강재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직접 수출과 수요산업의 수출 호조로 국내 철강 수요 증가에 기여 전망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232조 무역규제가 강화될 경우 한국 철강 수출에 직접적 영향 예상
  - 과거 쿼터 물량 개정 협상의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232조 시행 이후 한국은 대미 철강 교역에서 지속 흑자를 달성 중으로 규제 완화에 불리한 상황
- (공통) 중국 견제 강화, 글로벌 과잉생산 해소 및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다양한 조치에 따라 대미 수출 차질이 발생하거나 대미 시장 진입에서 제약이 커질 것으로 예상
  - 철강 수출 제품의 원산지 기준이 조강(반제품) 생산국 기준으로 변경될 경우, 일본 소재 사용 한국 제품, 한국 소재 활용 해외 생산 제품의 수출 어려움.
  - \* 미국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한 조사 및 관세 인상 조치로 멕시코 경유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USMCA 대응 대미 투자가 확대될 경우 생산 비용 부담 가중

### ■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

- 한국의 철강 내수가 정체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글로벌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어 미 대선 향방에 따라 교역조건 및 산업환경 전반의 불확실성 심화 예상
  - 통상 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 강화 필요
  - 중국에 의해 촉발된 글로벌 초과 생산물량의 국내 수입 급증 가능성에 대응하여 과잉생산·불공정관행 등 실효적 보호수단의 사전적 검토 필요
- 해리스(민주당) 집권에 대비하여 한국 철강산업의 탈탄소 경쟁력 확보는 지속 필요
  - 국내 탈탄소 제철 기술의 상용화 노력과 이에 수반되는 에너지·원료 인프라 강화, 우방국과의 기술 및 친환경 원료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적정 규제 설정도 중요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대미 수출 위축 가능성 및 친환경 기초 후퇴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수립
  - 미국 관세 정책의 수출 영향 파악, 한국 제품 원산지 정보 구축 및 신수요·시장 발굴 지속 추진
  - 부원료 조달 리스크에 대비하여 특정국 의존도 완화, 민간 비축 확대, 공급망 안정성 개선

〈표 6〉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철강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분야	해리스(민주당)	트럼프(공화당)
주요 정책	기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내 수입 고탄소 제품에 대한 탄소관세 부과 추진</li> <li>· EU와 마찬가지로 수입 제품의 탄소집약도 정보 요구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정책 기초의 후퇴가 예상되나, 미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존의 기후·환경정책을 활용할 가능성도 존재</li> </ul>
	통상·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국 산업을 위한 보호무역정책의 방향은 유사하나 공정무역 중시, 동맹중심 공급망 재편 등 방식은 차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안보 개념 중시, 232조 등 보편관세에 입각해 미국시장에서의 관세 장벽 강화</li> <li>· 대한민국 적용 조건 강화 가능성</li> </ul>
산업 환경의 변화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철 혁신기술의 상용화 경쟁 치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규제로 글로벌 교역규모 감소에 영향</li> </ul>
	생산·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의 전기로 및 대체철원(HBI 등) 관련 설비투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생산역량 강화, 주변국이 아닌 대미 직접 진출 필요성 증대</li> </ul>
	경쟁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탄소 친환경 경쟁우위 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 장벽 강화로 비용경쟁력 중요</li> </ul>
	GV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존도 저하, 신흥국 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존도 저하, 신흥국 부상</li> </ul>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강판 등 친환경·고기능성 철강재 수요 확대</li> <li>· 정부 및 민간 수요에서의 저탄소 철강재 요구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 및 가스전 시추 확대 등에 따른 전통 에너지용 강재 수요 확대</li> <li>· 자동차, 전자 등 철강 수요산업의 구조변화로 철강 수요 구조에 영향</li> </ul>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탄소 기술과 설비에 대한 투자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내 생산 강조 원칙 강화에 따라 현지 진출 필요성 확대</li> </ul>
	수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 관련 무역장벽 강화로 수출에 따른 행정적·비용적 부담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2조의 개정 및 무역규제 확산 등 대미 진출 제약 요인 증가</li> </ul>
	공급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스크랩, 대체철원(HBI) 등 친환경 원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중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금철 등 특정국 고의존형 부원료 조달 위험성 증가</li> </ul>
	GV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방국 활용 수출 기회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강기준 원산지 변경은 232조 등 무역규제하에서 수출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li> </ul>
정책 시사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역 여건의 불확실성은 양 시나리오 모두에서 심화될 것으로 예상</li> <li>· 글로벌 시황 부진에 따라 국내 철강시장으로의 수입 급증 가능성</li> </ul>	
대응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탄소 제철 기술의 상용화</li> <li>· 에너지·원료 인프라 강화</li> <li>· 기술 및 친환경 원료 국제협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관세 정책의 수출 영향 파악</li> <li>· 한국 제품 원산지 정보 구축</li> <li>· 신수요·시장 발굴 지속 추진</li> </ul>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나리오별 맞춤형 해외 투자 전략, 수출 전략,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 마련</li> <li>·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에 따른 산업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적 보호수단 리스트 마련</li> </ul>	

자료: 산업연구원 정리.

## (5) 화학

### ■ 주요 정책·강령 비교

- 해리스(민주당)의 공약 중 국내 화학산업에 영향이 큰 정책은 환경과 무역 분야이며, 적극적인 녹색경제 및 탈탄소화 전환과 강화된 ESG 규제 수준이 무역 환경에도 적용
  - \* 해리스는 환경 및 노동 관련 문제가 있는 USMCA, TPP 등 일부 무역협정에 반대 표명<sup>12)</sup>
- 트럼프(공화당)는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을 즉시 철폐하며, 대중국 최혜국대우를 철폐하는 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시행 선언
  - 트럼프는 신재생에너지에 대규모 투자와 성장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을 즉시 폐지하며, 에너지 인프라 환경규제(신증설 투자 관련)도 완화할 전망

### ■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

- 해리스(민주당) 집권 시 공정무역을 통한 자국 제조업 보호,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으로 기업의 탈탄소화 전략 추진 가속화
  - 수입 화학제품 중 정부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노동 및 환경 관련 법제도 미비에 의한 특정 시장 상황 지정 등을 무역장벽으로 활용할 전망
  - ESG 기준 상향 조정, 친환경 정책 강화로 우리 화학기업의 규제 준수비용 증가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보편 관세 도입으로 자국 제조업 보호, 중국에 대한 적극적 견제, 석유 개발 및 화석에너지 생산규제 축소 추진
  - 바이든 행정부 산업보조금 정책 폐기, 수입 대상국 전반 대상 보편관세 도입 시 수입단가 인상 불가피
  - 에너지 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 미국 내 석유 공급 촉진으로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 기대

### ■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해리스(민주당) 집권 시 국산 화학제품의 수출 변화는 제한적이나 공급망 내 ESG 기준이 강화되면서 생산부문 내 친환경 공정 전환이 가속화
  - (수출) 바이든 정부에서도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대미 수출은 점진적으로 증가
    - \* 미국 내 노후 정제시설 폐쇄로 국산 석유제품 수요 증가
    - \* 미국 경기 개선으로 석유화학 제품 대미 수출규모는 확대되겠지만 대중국 수출에 비해 물류

12) KOTRA 워싱턴 무역관(2024),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제24-058호, KOTRA, 2024. 8. 6.

- 비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
- (투자)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항공유, 비화학부문 및 친환경 공정 전환 관련 투자 확대
    - \* 항공유 및 친환경 연료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
    - \* 미국 첨단기술 및 그린 에너지 육성 정책으로 미국 내 이차전지, ICT 핵심 화학중간재 생산시설 투자 확대
  - (공급망) 생산부문 친환경 공정 전환 가속화, 공급망 내 ESG 기준 강화 기조 확산
    - \* 환경규제 수준 강화가 글로벌 표준으로 적용되며 국내 화학사들의 규제 준용 비용 증가
    - \* 탈탄소화 전략 추진 가속화, 강화된 ESG 표준이 공급망 내 하공정(성형, 가공)까지 적용되며 협력 중소기업의 ESG 기준도 동반 상승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화학제품 공급망 내 조달 안정성은 소폭 향상, 사업다각화 중심 대미 투자 확대
    - (수출) 미 보호무역주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산 화학제품의 미국향 수출 변화는 제한적
      - \* 미국 내 정제시설 가동률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대미 석유제품 수출 비중은 현재 수준(10%) 유지 전망
      - \*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대미 수출 비중이 크지 않고, 대부분 무관세 품목에 해당하여 대미 수출 규모의 변화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투자) 미국 내 생산시설 추가 증설, 사업다각화를 위한 다운스트림 분야 투자 확대
      - \* (트럼프 1기) 석유화학 플랜트 승인 규제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 대미 직접 투자규모 변화는 미미
      - \* 반도체·배터리 등 비화학 다운스트림 직접투자가 기대되나, 현재 국내 석유화학사들의 수익성 개선 선결 필요
    - (공급망)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로 석유화학제품 공급망 내 조달부문 안정성 향상 기대
      - \*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규제 및 석유 개발과 생산 규제 축소 시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 기대
      - \* 나프타(원료) 가격 안정화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전망되나, 미국산 조달 비중이 낮아 불안정성 해소 폭 미미 예상

#### ■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

- 해리스(민주당) 집권 시 상향 조정된 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산업 공급망 전반의 친환경 전환 전략 지원

- 국내 화학기업(정유 및 석유화학 포함)의 친환경 투자액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제공
- 친환경 연·원료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폐플라스틱 수거, 분리, 재활용 업종 내 기업의 경영 안정화 지원 및 바이오 유래 원료 조달을 위한 원료 조달국과의 협력 강화
- 고위험, 장기 연구개발을 공공부문에서 주도하며 시장 내 확산을 지원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국산 화학제품의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 개선 필요
  - 미국과의 무역 관계 및 셰일 오일 생산 증가를 고려한 미국산 원유 수입비중 확대
  - 국산 에틸렌 계열 제품 원가경쟁력 확보 위한 나프타 무세화 유지로 국내 기업의 생산비 부담 완화

〈표 7〉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화학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분야	해리스(민주당)	트럼프(공화당)
주요 정책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경제, 탈탄소 및 그린전환</li> <li>· 청정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li> <li>·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li> <li>· 글로벌 기후 리더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회의적</li> <li>· 그린 뉴딜 즉시 철폐</li> <li>· 에너지 인프라 환경규제 완화</li> </ul>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 노동 관련 규제 강화로 지속가능한 무역 환경 구축</li> <li>· USMCA, TPP 등 일부 무역협정 내 환경, 노동 문제 이유로 반대</li> <li>· 공정무역을 통한 미국 제조업 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보편, 상호 관세)</li> <li>· 대중국 최혜국대우 철폐</li> <li>· 미국 우선주의</li> </ul>
산업 환경의 변화	무역·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보조금 활용 자국 기업 보호</li> <li>·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 적극 활용</li> <li>· 우회수입 조사 비중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 관세 도입으로 자국 제조업 보호</li> <li>· 중국에 대한 적극적 견제</li> <li>· 석유 개발 및 생산규제 축소</li> </ul>
	GV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G 기준 상향 조정, 친환경 정책 강화로 국내 기업의 규제 준수비용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내 석유 공급 확대로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 및 조달 안정성 향상 기대</li> </ul>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원료 및 중간재 생산 투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내 생산시설 추가 증설, 사업다각화 관련 투자 확대</li> </ul>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현행 유지 시, 미미한 영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무역주의 강화에도 제한적 영향</li> </ul>
	공급망 GV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부문 친환경 공정 전환 가속화</li> <li>· ESG 기준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로 조달 부문 안정성 소폭 향상</li> </ul>
정책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원료 및 연료 관련 연구개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유 등 고부가 제품 시장 확대</li> <li>· 중국산 배제 경향국(인도, 튀르키예 등) 시장 진출 지원</li> </ul>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프타 세제 개선</li> <li>· 비화학 사업구조 다각화 전략 지원</li> </ul>	
대응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제품 원가경쟁력 확보</li> <li>· 친환경 전환, 신규 사업기회 선점</li> <li>· 탈탄소화 공통 기술 개발 및 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및 신흥국 경쟁우위 추격 대응</li> <li>· 원유 도입선 및 수출국 다변화</li> </ul>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비관세장벽 대응력 제고</li> </ul>	

자료: 산업연구원 정리.

## (6) 바이오의약품

### ■ 주요 정책·강령 비교

- 해리스(민주당)는 바이든 행정부의 캔서 문샷(Cancer Moonsho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기존 헬스케어 정책 기조 유지·강화 예상
  - (캔서 문샷) 암 치료 연구·개발 가속화로 25년 내 사망률 절반 감소 및 약가 절감 목표
    -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공공의료보험기관(CMS)과 제약사 간 협상으로 약가 인하<sup>13)</sup> 추진, 2026년 10개 의약품 가격 인하를 시작으로 2029년부터는 40개 의약품으로 확대 예정
    - \* IRA 내 2022년 말까지 예정된 ‘Affordable Care Act(ACA)’, 이른바 오바마케어 보조금 3년 연장안이 포함, 메디케어<sup>14)</sup>를 비롯한 예방의료와 공공 건강 프로그램 확대 지지
- 트럼프(공화당) 진영도 약가 인하, 자국 내 필수약품 생산, 공적부조·사회보험 개혁 등이 언급되었으나 바이든 정부가 수립한 기존 헬스케어 정책은 축소 또는 재편, 철회 계획
  - 트럼프 1기에서는 약가 인하 대상 의약품을 특정해서 협상하는 직접적인 방식이 아닌 국제 가격 비교를 통해 최혜국(MFN)보다 낮은 가격으로 메디케어 약가 인하 추진
  - ACA 폐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자격·혜택 축소 등 저소득층 의료 복지정책 축소

### ■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

- 해리스(민주당) 집권 시 우호국 중심 ‘바이오제약 연합<sup>15)</sup>’ 결성, 공급망 강화·생명공학 기술 협력 확대
  - 미국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의 일환, 국가안보위원회(NSC)는 OPPI<sup>16)</sup>와 협력하여 안전한 바이오제약 공급망 지원을 위해 바이오제약 연합(Biopharma Coalition) 협력 예정
    - \* EU·인도·일본·한국과 공급망 협력, 35억 달러 이상 투자(중국의존도 높은 API 포함)
    - \* (국방부) 바이오제조 10억 달러 투자, 육·해·공군 연구소와 바이오 소재 개발·사업화 프로그램 수립
    - \* (국립과학재단) 바이오파운드리 등 인프라 투자 확대, 캐나다·일·한·영 참여 국제 협력 프로그램 추가 투자

13) IRA Subtitle B(Prescription Drug Price Reform) 포함 약가 인하는 메디케어 Part D(전문의약품 보험)와 Part B(의료보험) 해당 의약품 우선 대상, 2026년에는 Part D 10개 의약품 해당, 매년 추가되어 2029년 Part D & Part B 각 20개 의약품으로 확대.

14) IRA Subtitle C(Affordable Care Act Subsidies)에 포함.

15) The White House(2024),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s Actions to Advance American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중 미·EU·인·일·한으로 구성된 ‘Biopharma Coalition’ 발표, 6. 25.

16) Office of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전염병 대비 및 대응 정책실).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국내 필수약품 공급망 구축 투자 확대, 통상정책 강화
  - (트럼프 1기) 코로나19 시기 OWS<sup>17)</sup> 가동, 미국산 원부자재의 국외 유출을 저지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 실시, 대선 성공 시 의약품 포함 필수 상품의 중국산 수입 중단 목표 4년 계획 도입 표명

### ■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해리스(민주당) 집권 시 바이오시밀러 수출 증가세 유지, 메가 프로젝트로 첨단 R&D 촉진
  -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특허 만료 예정, 바이오시밀러 중심 대미 수출은 증가 전망
    - \* 정부 주도 메가 프로젝트 지속, 신규 치료 방법·물질 대상 글로벌 제약사와 대형 기술거래 증가 ▶ 공동 R&D 비중 확대 예상되나, 약가 인하로 빅파마 혁신 활동이 위축될 경우 첨단약품 개발도 부진할 가능성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한국산 바이오시밀러 수요 유지, 직·간접적 통상 압력 예상
  - 규제 감소, 법인세 인하 공약은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
    - \* 2018년 한미FTA 개정 협상 당시 트럼프 정부의 요구로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조항이 삭제되어 관세 및 무역 제한 외에도 통상정책에 따라 신약 개발 의지 저하 우려
    - \* 트럼프 역시 제네릭·시밀러 사용 촉진 우호적 입장, 한국 바이오시밀러 수요는 최소 현재 수준 유지 예상
- 공화-민주당 공동 발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초당적 지지, 유전자 분석·CDMO 부문에서 중국기업 입지 위축이 예상되나 의약 제조환경의 특수성, 규제 및 전환 기간을 고려할 때 즉각적 수혜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

- 해리스(민주당) 집권 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고 국내 산업생태계 기반 강화
  - 탈중국 GVC 재편 예상, 한국은 CMO 중심 생산 부문 강점을 유지하면서 R&D 경쟁력 제고 및 상대적 경쟁열위인 조달,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대외 협력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 첨단바이오 인력 양성 및 연구비 지원 등 R&D 투자와 함께 첨단약품 가치평가 조정으로 국내 바이오신약 개발 동기 제고, 중국 의존도 높은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자급률 제고

17) Operation Wrap Speed,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근거 코로나 백신 개발·보급(182억 3,000만 달러).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필수약품 적정재고 관리 및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로 가격조정 대비
  - 필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에 대비해 국내 필수약품 적정 재고 관리, 바이오시밀러의 현지 시장가격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력 제고 및 대응 논리 마련
  - \* 인도·유럽·일본 기업과 바이오시밀러 경쟁 심화 예상, 단기 관점 가격 인하보다 중장기 혁신 바이오베터 특허·기술 확보 및 경쟁력 제고
- 다자간 협력 속 입지 강화와 CDMO 시장변화에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
  -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기술·정보 교류, 다자간 프로그램 참여로 국제적 평판 및 리더십 확보 노력
  - (생물보안법 추진) 중국 CDMO 시장점유율 차지 위한 국가·기업 간 경쟁 심화 예상, 한국 기업은 생산 용량 규모의 경제 확보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향상, 해외 파트너링 확보 위한 비즈니스모델 강구

〈표 8〉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바이오의약품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분야	해리스(민주당)	트럼프(공화당)
주요 정책	약가 인하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하여 미국 공공의료보험기관(CMS)-제약사 간 약가 협상	· 정부가 직접 약가를 통제하지 않고 국제가격 비교 통해 제약사의 자발적인 가격 조정 유도
	사회 보험	· 메디케어 및 처방약 비용 상한제 확대	· ACA 폐지 및 메디케이드 수혜자 자격요건 상향으로 정부 지원 공공 헬스케어 축소
산업 환경의 변화	생산·투자	· 5년 내 필수약품 25% 미국 내 생산 · NBBI <sup>18)</sup> (2022) 후속 정책 다수 지속	· 관세 조정·무역 제한을 통해 모든 필수약품 자국 내 생산 추진
	경쟁 관계	· 의료비 지출 감소 위해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사용 독려, 제약사 및 CDMO 간 경쟁 심화	
	GVC	· 중국 배제하는 동시에 EU, 인도, 일본, 한국 등 동맹국 중심 GVC 재편	· 자국 우선주의, 리쇼어링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투자	· 정부 주도형 메가 프로젝트, 공동·협력연구 참여 시 R&D 투자 확대	· 약가 인하 시 빅파마의 수익성 개선으로 혁신활동 투자 확대 기대
	수출	· CMO, 바이오시밀러 중심 수출 확대	
	수입	· 필수약품·원부자재 수입제한 등 통상압력	
	GVC	· 제조 역량 기반 GVC 참여 확대	
정책 시사점		· 첨단바이오 분야 산업생태계 강화	· 보호주의, 시장가격 조정에 선제적 대비 필요
	공동	·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고 API·필수약품 재고 관리 필요	
대응 방향		· R&D 경쟁력 제고, 경쟁열위 분야 보완 · 첨단신약 약가 조정 등 관련 규제 혁신과 대외협력 활용	· 바이오시밀러 가격 개입 고려하여 협상력 제고 및 대응 논리 마련 · 바이오베터 특허·기술 개발로 제품경쟁력 제고
	공동	· 다자간 협력 속 입지 강화와 CDMO 시장변화에 선제적 대응	

자료: 산업연구원 정리.

18) National Biotechnology & Biomanufacturing Initiative(2022. 9. 12).

## (7) 방위

### ■ 주요 정책·강령 비교

- 해리스(민주당)의 공약 중 방위산업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 기조는 ‘미국의 리더십 강화’로, 미국의 주도하에 동맹국 간 안보·방산 협력의 확대에 중점
  - (인도·태평양) 미국 중심 양자 동맹에서 QUAD, AUKUS, 한·미·일 등 소(少)다자간 안보·방산 협력 확대
  - (유럽) 우크라이나의 주권 수호, NATO 결속 유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분쟁 확대 방지 목표 추구
- 트럼프(공화당) 공약 중 동맹 강화(Strengthening Alliance) 정책은 동맹국의 자체적인 안보 역량 제고를 위한 지출 증가 요구로 실현될 전망
  - 주한미군 재배치를 거론하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담은 재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NATO 탈퇴 위협을 빌미로 회원국에 국방비 인상(GDP 대비 최소 2% 수준)을 요구
  - 동맹국과의 협력보다는 자국 중심의 방위산업 공급망 회복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산 우선구매제도(Buy American) 등 자국 방산업체 보호 기조가 강화될 전망

### ■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

- 해리스(민주당) 집권 시, 러-우 전쟁 지속으로 글로벌 생산·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동맹국 간 결속이 강화되며 방위산업의 GVC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
  - (수요) 첨단 무기 중심으로 미국의 국방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NATO 국가 역시 무기수요 증가세 유지
  - (생산·투자) 러-우 전쟁 지속 및 각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로 생산·투자 확대 기조 지속
  - (GVC) 한국·일본·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NATO 국가 간 방산협력 확대 예상(사이버보안, MRO 등)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미국 중심의 방산 공급망이 강화되며 국가 간 방산협력이 후퇴
  - (수요) 러-우 전쟁 축소로 수요가 급감하나, NATO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며 수요 감소를 일부 상쇄
  - (생산·투자) 러-우 전쟁 지원금이 미국 방산업체로 귀속되며 미국업체의 경쟁력 및 생산능력 확대



- (글로벌 경쟁관계) 미국의 대중동 수출통제 완화, 미국업체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수출경쟁 심화
- (GVC) 미국의 자국 내 공급망이 강화되면서 유럽의 역내 결속 심화로 GVC 확장 후퇴

### ■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해리스(민주당) 집권 시, 국내 방산수출 호조가 지속되며 선진국의 방산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발생
  - (수출입) NATO 등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이 확대되면서 국내 방산수출 호조 지속 전망
  - (국내외 투자) 방산수주 증가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업체의 자발적인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구매국이 요구하는 현지생산을 수행하기 위한 해외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공급망·GVC) 미국의 방산공급망 진입, 미국 노후 함정 MRO 사업 수주, NATO와의 방산협력 확대 등 방산 GVC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발생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국내 방산수출이 둔화되고 한·미 방산협력이 후퇴
  - (수출입) 러-우 전쟁 축소로 글로벌 방산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수출이 둔화될 위험
    - \* 미국 국방비 지출 증가의 수혜는 미국업체에 귀속될 전망이며, 유럽의 역내 결속이 강화되면서 NATO 국가의 국방비 지출 증가에 따른 반사이익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바이든 정부에서 강화되었던 사우디·UAE 등 인권침해국에 대한 수출통제가 완화될 경우, 중동시장을 둘러싼 미국업체와의 경쟁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
  - (국내외 투자) 방위비 분담금 인상보다는 수출 둔화에 따른 투자 감소가 우려
- 현재 내수보다 수출이 방산업체의 투자 결정에 더 큰 영향
  - (공급망·GVC) 무기체계 공동개발, 글로벌 방산공급망 진입, NATO와의 방산협력 등 최근 추진 중인 국제협력의 후퇴가 불가피
  - 미·중 패권경쟁 격화로 중국산 원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으며, 희토류 등 방산물자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 증대

### ■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

- 해리스(민주당) 집권 시, 국내 방산수출 호조 지속 및 선진국 방산공급망 진입을 위한 범부처 협력 필요
  - 첨단 무기체계 공동 R&D 및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 방산공급망 진입을 촉진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국내 방산수출 둔화 및 한·미 방산협력 후퇴에 대비
  -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조기 체결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조속히 매듭
  -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따른 협상안 준비

〈표 9〉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방위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분야	해리스(민주당)	트럼프(공화당)
주요 정책	동맹국 협력	· 미국의 리더십 회복 · 동맹국 간 안보·방산 협력 확대	· 동맹국 강화 ·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러-우 전쟁	· 우크라이나 지원, NATO 결속 강화 · 탄약, 전차, 미사일, 항공기 등 지원	·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혹은 중단 ·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미국 방산업체에 지급
	수출 통제	· 사우디·UAE 등 인권침해국에 대한 수출 통제	· 방산수출과 인권문제 분리
산업 환경의 변화	수요	· 글로벌 방산수요 증가세 지속	· 러-우 전쟁 축소로 방산수요 둔화 · NATO 국방비 지출 확대, 수요 감소 일부 상쇄
	생산·투자	· 러-우 전쟁 지속, 주요국 국방비 지출 확대로 생산·투자 확대	· 미국업체의 생산 및 경쟁력 강화 전망
	경쟁 관계	· 러시아·중국의 점유율이 하락하며, 미국, 한국, 독일 등의 경쟁 격화	·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완화, 미국업체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수출경쟁 심화
	GVC	· NATO-인·태 등 지역 간 결속 형성 · 동맹국 방산협력 확대로 GVC 성장	· 자국 중심의 공급망 정책으로 GVC 후퇴 · 유럽도 역내 내부 결속으로 선회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수출입	· 글로벌 국방비 지출 확대 · 국내 방산수출 호조 지속	· 러-우 전쟁 축소로 방산수출 둔화 · 중동 지역을 둘러싼 수출경쟁 심화
	투자	· 업체의 자발적 투자 증가 · 현지생산 요구 대응 해외투자 증가	· 수출 둔화에 따른 투자 감소 우려 · 방위비분담금 인상 및 방위력개선비 감소에 따른 내수 위축보다 수출 둔화가 투자 결정에 더 큰 영향 예상
	공급망·GVC	· 방산 GVC 진입 기회 확대	· 미국·NATO·AUKUS 등 동맹국과의 방산협력 후퇴 불가피
정책 시사점		· 국내 방산수출 호조 지속 · 선진국 방산 공급망 진입을 위한 범부처 협력	· 국내 방산수출 둔화 및 한·미 방산협력 후퇴에 대비
	공통	· 미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에 따른 기회 존재	
대응 방향		· 반도체·배터리 등 대미 공급망 협력 · 미국 방산공급망 진입 지원정책 필요	·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조속 체결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공통	· (범부처 수출지원 가동) 유망국가 선호하는 기술이전·금융지원·현지생산 위한 범부처 지원 · (원자재 리스크 대응) 희토류 등 중국발 원자재 리스크 대응, 공급망 안정성 강화	

자료: 산업연구원 정리.

## (8) 기계

### ■ 주요 정책·강령 비교

- 해리스(민주당)는 탄소중립 및 인프라 투자 정책과 공급망 재편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 및 친환경화 정책 강화와 동맹국 중심 공급망 재편을 표명
  - 친환경 에너지 확대 및 화석연료 축소, 탄소중립 기조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
  -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교량·항만 등 인프라 투자 지속, 주택공급 건설투자 확대 등
  -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 확보 추진
- 트럼프(공화당)는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인프라 구축, 자국 중심 무역·공급망 강화 표명
  - 기후변화 회의론, 그린 뉴딜 즉각 폐기 및 에너지 규제 철폐와 화석연료 소비 확대
  -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한 규제 완화, 세금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

### ■ 글로벌 산업환경

- 해리스(민주당) 집권 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설비투자 및 R&D 확대 전망
  - 저탄소 생산공정 전환을 위한 기계·장비류 교체 수요 확대 및 R&D 투자 지속적 증가 전망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기후변화 대응 기조 약화 및 화석연료 기반 제품 수요 확대 가능
  - 그린전환 관련 기계·장비 투자 감소, 화석연료 기반 기계·장비 수요 및 투자 지속 예상
- 공통적으로 첨단산업 관련 공작기계 및 부품 산업은 경제 안보 기조가 강화되면서 미국 중심 공급망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 USMCA 협정 의거 관세 혜택 및 저(低)인건비 활용을 위해 멕시코 중심의 공급망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 AI 투자 확대, 데이터 센터 등 전력수요 증가로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투자 증가

### ■ 한국 기계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해리스(민주당) 집권 시 건설·운반·하역기계,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제품 수출 확대 예상
  -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기반 건설기계 및 운반·하역기계, 프레온 냉매 기반 공조기계 등에 대한 규제 강화로 관련 저탄소 기계·장비 교체수요가 증가하며 관련 제품 수출 및 투자 확대 예상

- 미국 내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 관련 장비·부품 수요 증가 예상, 친환경 에너지 분야 경제 안보 보장을 위해 한국산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변압기, 풍력발전기 및 부품 수출 증가 예상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건설·운반·하역기계, 화력 발전 관련 제품, 금형 수요 증가 예상
  - 화석연료 규제 철폐, 셰일가스 등 시추 플랜트 건설이 늘어나면서 건설·운반·하역기계, 화력발전 가스터빈 관련 장비·부품 수출 발생 가능
  - 수소건설기계, 친환경 냉매 기반 공조 시스템(HVAC) 등 탄소중립 관련 제품 생산 및 기술 개발 투자 위축
  - 자동차 등 자국 내 공급망 확대, 금형 등 부품 생산용 품목 대미 수출 증가 전망
- 공통적으로 기계부품·장비 등에 대한 공급망이 중국 대신 멕시코로 대체되면서 수출시장에서 경쟁 심화 예상
  - \* USMCA 역내 생산 비중 확대, 부품보다는 제조장비 수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 예상
  -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 노후 전력망 재구축(교체) 수요로 전기기기 수출 확대
  - 첨단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확대로 공작기계 및 부품 수요 증가, 수출 증가 예상

#### ■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

- 해리스(민주당) 집권 시 녹색 전환에 대응하는 제품의 R&D 투자 및 판로 개척 지원 확대
  -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전기기기, 기계장비·부품 등 생산 기업 육성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
  - 수소건설기계, 친환경 냉매 HVAC 등 친환경 기계·장비 제조기술 역량 강화, 판로 개척
- 트럼프(공화당) 집권 시 보호무역조치 및 친환경 기조 약화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탄소중립 추진 기조를 면밀히 고려, 제조장비 전동화 전환 투자 지속 여부 결정 및 대응 방안 검토
  - 공작·건설기계는 최근 대미 수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트럼프 집권 시 관세 부과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화석연료 기반 기계·장비의 기술 경쟁력 및 효율성 개선, 신뢰성 확보 지원 전략 수립
- 공통적으로 중위·중고위 기술 분야 기계·부품·장비 공급망의 한국 내 구축 및 글로벌 경쟁을 위한 품목 비교 및 선정, R&D 투자 지원 등 산업 육성 정책 마련
  - 원자력 관련 에너지장비·기계산업 생태계 정상화, 미국 전력망 교체 사업 수주 지원
  - 공작기계 및 건설·운반·하역기계의 기술력·신뢰성 강화 및 미국 내 판로 확대 지원

- 첨단산업에 이용되는 부품·장비의 신뢰성 확보, 인증 절차 및 판로 확보 지원
- 탈중국 기초 공급망 재편 전략을 고려한 기계산업 수출·투자 전략 마련

〈표 10〉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기계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분야	해리스(민주당)	트럼프(공화당)
주요 정책	에너지	· 화석연료 규제, 친환경 에너지 전환 · SMR 중심 원자력 투자 확대	·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규제 철폐 · 화력발전 유지, 그린 뉴딜 폐지 · SMR 중심 원자력 투자 확대
	인프라	· 도로, 교량 등 인프라 및 주택 건설 증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대	· 주택 건설 증가, 셰일가스 등 화석연료 시추 플랜트 건설 확대
	공급망	· 첨단산업 중심 미국 내 공급망 구축	· 첨단산업 및 자동차 등 주요 전통 제조업의 미국 내 공급망 구축
산업 환경의 변화	수요	· 친환경 에너지·기계장비, 부품 수요 증대 · 수소건설기계, 친환경 냉매 기반 공조기계 등 친환경 제품 수요 확대 · 전력망 확대 및 교체 수요 증대	· 화석연료 기반 기계·장치에 대한 수요 지속 · 화력발전 관련 기계장비·부품 수요 증대 · 전력망 확대 및 교체 수요 증대
	생산·투자	· 미국·멕시코 중심의 기계산업 공급망 구축 기초 강화 · Carbon-Free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관련 투자 확대	
	경쟁관계	· 저위~중위 기술 기계부품·장비 중심으로 멕시코와의 경쟁관계 심화, 중국 경쟁관계 완화	
	GVC	· 첨단산업 관련 기계산업의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 · 멕시코 중심 기계산업 공급망 구축	· 첨단산업 및 자동차 등 주요 전통 제조업 관련 기계산업의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수요	· 친환경 에너지 관련 부품·장비, 친환경 냉매 적용 공조기계 등 수요 확대	· 가스터빈 관련 부품 등 화력발전 관련 기계장비·부품 수요 증대
	투자	· 탄소중립 관련 기계장비·부품 기술개발 투자 증대	· 저탄소 전환 관련 제품 개발 및 생산공정의 전통화 투자 감소
	수출	· 단기 충격, 원산지 규정에 의한 중국 생산, 미국 수출 기업의 수출 감소 · 중장기 판로 변경 · 중국에서 멕시코로의 판로 변경	· 단기 충격,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 · 원산지 규정에 의한 중국 생산 - 미국 수출 기업의 수출 감소 · 중장기 판로 변경(중국 → 미국·멕시코 등)
	수입	· 중국산 부품 수입 감소, 동남아·멕시코산 부품 수입 증가	
	공급망	· 미국·멕시코 중심으로 기계산업 공급망 재편	
	GVC	· 중위~중고위 기술군에 해당하는 제조장비 및 전기기기의 R&D·생산 부문 담당	
정책 시사점		· 친환경 제품·기술 중심으로 R&D 투자 확대 및 신뢰성 확보 정책 필요 ·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지원 확대	· 그린 뉴딜 폐지 시 관련 기업 출구전략 수립 · 기계산업 대상 관세부과조치 가능성 여부 검토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공통	· 미국·멕시코 중심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필요	
대응 방향		· 화석연료 기반 제품의 전통화 지원	· 화석연료 기반 제품 기술경쟁력 및 성능 제고
	공통	· 중위·중고위 기술 제조장비, 전기기기 중심의 기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 확보 · 미국·멕시코 중심 공급망 재편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지원 방안 마련	

자료: 산업연구원 정리.

## (9) 한국 산업의 대응 방향

### ▣ 대외적으로 국가전략을 명확하게 하되, 전술에서는 유연한 협상 채널 유지

- 첨단전략산업 및 주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미국 및 동맹과 새로운 국제분업구조를 형성하고 경제적 압력에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지지만, 일부 사안에서는 최대한 유연한 접근 필요
  - 미국 대선 향방에 따라 대중국 및 러시아 정책 급변 가능성에 대응
    - \* 중국은 아세안 지역,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 높은 협력체계 구축
    - \* 미국의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글로벌사우스에 대한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응

### ▣ 미 정계의 초당적 중국 견제 노선이 유지되면서 국가 신(新)산업·통상 전략 수립 시급

- 세계 산업정책의 부활, 국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
  - 과거 신자유주의 및 세계무역기구(WTO) 규범하 무역·통상 확장 국면이 종언을 고하면서 국가 전략과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파격적인 산업정책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전망
  - ‘경제논리’에 기반하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효율성 기반 세계시장 공략의 유효성이 제한되고, ‘전략논리’에 기반하는 국가별 ‘민-관 원팀’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지원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과 제도적 개선 필요
- 만성적·구조적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 등 중장기 성장잠재력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국제 정치·경제 환경 활용 중요
  - 국가·수출·투입 주도 성장에서 직면하는 한계생산성의 체감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기술전략의 추진과 병행하여, 첨단전략산업 및 주력산업 모두 탈중국화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여 변화하는 국제분업구조하에서 한국 산업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
- 주요국 대비 해외진출 기업의 유턴 저조<sup>19)</sup>, 지난 10여 년간 주요 외자 기업, 자산운용사, 서비스 기업의 이탈은 한국의 입지경쟁력(매력도) 향상을 위한 주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산업·기술 정책의 변화 필요
  - 관세율 외에도, 선진 경제권은 물론 주요국들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이미 활용 중이므로
- 과거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대규모 제조기반 유출의 연관성을 인정한다면<sup>20)</sup> 한국을 포함하는 주요 제조업 국가들은 통상전략에 대해 종합적·총체적 점검 필요
  - 관세율 외에도, 선진 경제권은 물론 주요국들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이미 활용 중이므로




19) 매일경제(2023), “美·日 7000개씩 돌아왔는데… 韓, 유턴기업 요건부터 너무 간간”, 1월 5일.

20) Lighthizer(2023), “No Trade is Free: Changing Course, Taking on China, and Helping America’s Workers”, Broadside Books, June 27.

국가 통상정책 관점에서 주요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성(Reciprocity)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필요

- 한국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글로벌 GVC 재편에 선제적 대응

〈표 11〉 주요 산업의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대응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요약)

해리스(민주당)	업종	트럼프(공화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 공동 협력(디바이스, 낸드)</li> </ul>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국 견제 반사이익 수혜</li> <li>· 디바이스·첨단공정 제조 점유율 방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산업 특허·지식재산 침해 공동 대응</li> <li>· 대중국 수출통제 품목 선제적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MS 공급망 이전(중국 → 인·태) 대응 강화</li> <li>· CHIPS 혜택 유지 및 첨단공정 수주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RA 지원 요건 관련 대미 협상력 제고</li> <li>· 미국 전기차 내수 중국 견제 수혜</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미 차 수출국 연계 관세 인상 대응</li> <li>· 탈중국 부품공급망 기회요인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부품 노동·친환경·중국 요건 강화 대응</li> <li>· 한국기업 투자 지역사회 소통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수출의존도 해소·수출선 다변화</li> <li>· 하이브리드(HEV) 기술력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물·소재 수입선 다변화 및 자립화</li> <li>· 탈중국 공급망 재편 주도적 참여</li> </ul>	 배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RA 축소·폐지 리스크 헤징(hedging)</li> <li>· 주요 기업 지원 및 신시장 적극 개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자원개발 투자 및 협력 확대</li> <li>· 국내 핵심 소재·부품 생산 지원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기업 미국 시설투자 효과 ▶ 협상 레버리지</li> <li>· 미국 내 안전성·고품질 시장지배력 확보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관세·장벽(GSSA·CCA) 대응력 제고</li> <li>· 제철 혁신기술 투자 및 R&amp;D 증대</li> </ul>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쿼터 리스크 대비</li> <li>· 원료·반제품 탈중국 공급망 리스크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탄소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li> <li>· 글로벌 탄소 규범 형성 적극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수요 및 대체 수출처 개척</li> <li>· 연원료, 부원료, 에너지 조달 리스크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G 규제 상향 본격화 대응</li> <li>· 공급망 전반 친환경 전략</li> </ul>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유 도입선(미국 확대) 및 수출국 다변화</li> <li>· 신흥국(중국·중동) 추격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연·원료 및 공통기술 R&amp;D 확대</li> <li>· 친환경 비관세 장벽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배제 경향국(인도·튀르키예) 진출 지원</li> <li>· 항공유 등 고부가 제품 시장 확대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중국 GVC 재편 기회요인 극대화</li> <li>· 미국향(向) 첨단 연구개발 및 협력 확대</li> </ul>	 바이오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시밀러 경쟁 심화·가격 개입 대응</li> <li>· 혁신제품 개발 경쟁력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R&amp;D·혁신금융 생태계 진입 적극 지원</li> <li>· 개발·임상 등 경쟁우위 강화 대책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약품 적정재고 확보</li> <li>· 바이오베터 특허·기술개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 방산 시장 및 공급망 진입</li> <li>· 수출확대 및 해외투자(생산) 요구 수준 조절</li> </ul>	 방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분쟁 종결 및 수요 급감 대비</li> <li>· 대외방산협력 지속 확대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 방산 공급망 진입 지원</li> <li>· 무기체계 수출 지원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조기 체결</li> <li>· 방위분담금 관련 창의적·호혜적 해법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탈탄소 전환 수요 선점</li> <li>·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확대 기회요인 수혜</li> </ul>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석 에너지 관련 수요 기회요인 활용</li> <li>· 친환경 전략·투자 유연성 확보(속도 조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R&amp;D 확대 및 신뢰성 확보</li> <li>· 친환경 기계·부품 육성 및 판로 개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석연료 관련 기술력 제고 및 판로 지원</li> <li>· 품목별 관세 부과 영향 분석 및 수익성 주력</li> </ul>

자료: 산업연구원 정리.

주: 업종별 상단(1행)은 대응 방향, 하단(2행)은 정책적 시사점.

■ 국가 신산업 전략: 업종별·권역별 30년 미래 전략 재설계 필요

- (산업 전반에 걸친 국제분업구조의 재편) 한국 주요 산업은 중국과 밀접한 가치사슬 연계하에 발전했으나,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탈중국 기조하에서는 새로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과 생산·판매 지역 다변화 전략 필요
- (대체 불가능성·레버리지 역량 강화) 글로벌 경제안보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업종별·가치사슬 별로 자율성과 선도성을 확보하여 대체 불가능한 분야를 발굴·육성

■ 국가 신통상 전략: 지역별 통상·국제협력 전략 재수립 필요

- (인도태평양·신흥국) 특정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소싱·생산기지와 수출시장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인도태평양·신흥국을 대상으로 산업외교 역량을 확충하고, 경제안보 협력체계 강화
- (중국) 한·중 산업협력 관계의 본질적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중국 활용 전략 재정립
  - \* 중국은 2013년 이후 대일·대미 수출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대미 기술 자립도가 상승하면서 이미 대외 경제·산업 관계 재정의<sup>21)</sup>

정은미 총괄 |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 선임연구위원 | emjung@kiet.re.kr | 044-287-3064  
 경희권 반도체·총괄 | 신산업실 | 연구위원 | hee0718@kiet.re.kr | 044-287-3288  
 조 철 자동차 | 시스템산업실 | 선임연구위원 | chch@kiet.re.kr | 044-287-3046  
 김경유 자동차 | 시스템산업실 | 선임연구위원 | kykim@kiet.re.kr | 044-287-3125  
 이재윤 철강 | 소재·산업환경실 | 연구위원 | jlee177@kiet.re.kr | 044-287-3829  
 조용원 화학 | 소재·산업환경실 | 연구위원 | yongwon@kiet.re.kr | 044-287-3079  
 최동원 화학 | 소재·산업환경실 | 부연구위원 | dwchoi@kiet.re.kr | 044-287-3144  
 황경인 배터리 | 시스템산업실 | 부연구위원 | kihwang@kiet.re.kr | 044-287-3081  
 정지은 바이오 | 신산업실 | 부연구위원 | je.jung@kiet.re.kr | 044-287-3293  
 심순형 방산 | 기계·방위산업실 | 부연구위원 | simsh@kiet.re.kr | 044-287-3214  
 김태영 기계 | 기계·방위산업실 | 부연구위원 | taeyoungkim@kiet.re.kr | 044-287-3090

21)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2024), “While the US and China Decouple, the EU and China Deepen Trade Dependencies”, Aug. 27.